Online Series

2022. 01. 20. | CO 22-03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와 '두꺼운 평화'

서 보 혁(평화연구실 연구위원)

김정은 정권이 노동당 정책결정기구들을 통해 밝히고 새해 벽두에 감행한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핵미사일을 극대화하려는 조치이다. 이는 북한이 미중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한국 내 정치일정 등을 활용해 대외협상보다는 군사력 강화를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그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 강화되는 가운데 비핵협상의 전도가 불확실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안목이 요청된다. 한편으로는 단계적인 비핵화 및 군비통제 협상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사회경제 발전 방침에 협력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국제협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의 대북정책을 준비할 때이다.

김정은 정권의 집요한 미사일 개발

2021년 12월 말, 미국 비정부기구 핵위협대응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은 김정은 정권 들어 미사일 시험발사(실패 포함)가 129회였다고 집계하였는데, 이것은 김일성 정권 15회, 김정일 정권 16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이다. 김정은 정권은 일련의 '은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필두로 중거리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단거리미사일 개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등 20종에 가까운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2022년 벽두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발사(1.5., 1.11.)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1.14., 1.17.)는

그 현주소이다. 이제 북한은 발사방식, 비행 거리 및 방식, 파괴력 등에서 다종다양한 미사일 능력을 확보해 보다 유연한 군사전략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1월 11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에는 김정은 총비서가 참관했고, 철도기동 미사일 시험발사는 "전국적인 철도기동미사일운용체계"(노동신문 1.15.) 수립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금년 들어 네 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언론은 주로 북한의 국내정치 혹은 대외교섭용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김정은 정권 들어 그 능력이 크게 높아진 미사일의 군사전략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보고에서 집권 10년간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완성하고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왔다고 자평한 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지고 있다며 "국가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혁명적 립장을" 표명하였다(중앙통신 2021.1.9.).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초대형 핵탄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무인정찰기 보유 등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업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군사력의 정예화·첨단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런 군사안보정책은 국내정치나 협상용이 아니라 자체의 목표와 진행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특히 1월에 과시한 고난도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그 종착점을 예상하게 해준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미사일 탄두에 핵을 장착해 실전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습·연속 발사 및 2차 보복공격 능력 확보 등 최고 과제의 달성을 위해 대내외 정세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정권은 미국과 끝을 알 수 없는 적대관계와 불확실한 동북아 지정학적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믿음직한 안전판으로서 핵미사일 보유를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2021년 12월 27~31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새해 들어 김정은이 참석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한다(중앙방송 2022.1.20.). 북한 관영 노동신문(1.4.)은 국가방위력 강화 사업을 비상방역사업, 반/비사회주의와의 투쟁과 묶어 "인민사수전, 제도보위전"의 과제라고 평가하였다.

핵미사일 완성 드라이브와 역내 불안정

북한 관영언론은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존에 수립해놓은 원칙과 기본방향에 따라 상대의 반응을 보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원칙이란 ① 자주권 존중, ② ‘선대선 강대강’, 기본방향은 ① 전쟁억제력 강화를 통한 평화조성, ② 자주권 존중 여부에 따른 대화와 대결 선택이다. 핵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우리 공화국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람용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핵보유를 전제한 입장 표명으로서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과 거리가 멀다. 북한은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제재 조치를 발표하자, 곧바로 두 차례의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로 응수하였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상황의 지속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남한의 선거정국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데 의도하지 않은 기회가 되고 있고 북한은 이를 십분 활용하는 형국이다. 1월에 열린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는 핵실험이나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사하는 언급까지 나왔다.

앞으로 5년여 동안 북한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밝힌 핵심 무기 보유까지 나아갈 것이고 이는 안보정책이 외교정책 앞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대북 제재 레짐의 지속,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낮은 남북/북미대화의 가능성, 북·중·러 협력 양상 등이 예상된다. 이는 대북 압박 중심의 북핵정책의 모순, 즉 그 불가피성과 한계를 동시에 말해준다. 그런 가운데서 김정은 정권은 경제개발에 주력해 장기집권을 도모할 것이다. 물론 2018년 같이, 북한이 적절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협상 구도는 지금보다 더 엄중할 것이다.

정책 대안으로서 ‘두꺼운 평화’

이상과 같은 북한의 입장과 역내 안보정세를 종합 고려할 때 대북정책은 새로운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북핵 중심의 위로부터의 접근을 수정 보완하는 것인데 그 방향을 ‘두꺼운 평화’로 제안해본다. 두꺼운 평화는 ‘튼튼한 평화’와 ‘두터운 평화’를 합한 것인데, 먼저 튼튼한 평화는 전통적인 안보정책을 통한 평화이다. 다만 그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증강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는 억제전략 수립은 불가피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대중·러 외교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정책에 비핵화가 당연히 포함되지만 최종 목표와 중간 목표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같은 군비통제와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등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남북·북미 투 트랙 대화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두터운 평화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모든 대북정책 이슈를 연계하지 않고 병행 전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방향은 한국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방식에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은 물론 2021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 그에 앞서 인권개선 관련 보편정례검토보고서(UPR) 3회 제출(2009, 2014, 2019) 등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상황과 제재를 고려해 그 시행이 더디지만 북한정권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의지는 뚜렷하다. 남북협력에 대비하되 그에 앞서 북한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제기구에 인력과 재정, 기술지원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제재 면제가 가능한 보건·의료·관광·인도지원 등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지속되어 온 분야이고, 코로나 상황의 완화 시 직접 협력의 재개가 유력시된다. 이런 접근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가져다줘 남북협력의 폭을 넓혀주고 결국 한반도 평화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대북정책은 안보평화정책과 인도개발정책을 양축으로 하는 하나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전개해나갈 필요가 커졌다. 그 둘 사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보다는 조율된 전개를 추구해 볼 만하다. 비핵화 정책은 그 비중을 유지해야겠으나 북핵문제에만 집중하는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에 재개된 교역이 시사하는 바를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삶과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최상의 목표 하에 관련 정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통합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준비할 때이다. 요컨대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평화프로세스를 보다 큰 호흡에서 내다보고, 보다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KINU 2022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